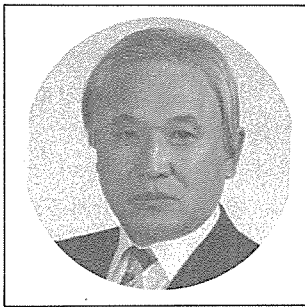


대단위 研究体制 구축질실



金 一 赫
(中央大學校 부총장)

지난 1960년대 초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그 일환으로 과학입국의 기치아래 계속 추진해 온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정책도 이제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황무지와도 같았던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도 누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과로 경제대국과 더불어 과학대국으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선진각국에서 과학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긍정적 이었다.

그러나 그 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화려하였으나 그 예산이나 시책은

이를 충분히 뒷바침하지 못했고 경제나 산업은 부흥하였으나 그 형태는 자생이나 자립이 아닌 의존이나 모방의 그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경제구조를 갖지 못하고 따라서 발전속에 불안과 한계를 내포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연초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10년내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강조하고 그달성을 위해서 최근 제정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비롯하여 대통령직속의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범정부 아니 범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발전을 위한 일대혁신정책을 강력히 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민주화와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입국 및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서 필연적인 정책이요, 귀납적인 시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욱이 현대의 과학기술은 과거의 그것과 달라서 그 종합성, 산업성 및 국제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종래의 단편적인 연구집단레벨에서 산, 학, 연등 종합적이며 국가적 레벨에서 연구자원이 확보되고 그 기초연구를 활성화하며 파이롯트의 개발과 아울러 산업으로의 응용 그리고 국제협력으로 과학기술의 향상이란 5대속성의 조화속에서 정부는 지원하고 산, 학, 연등은 차질없는 연구를 수행하는 그러한 대단위의 연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것은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의 전쟁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4년 이웃 일본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의 바이오사이언스시대에 대비하여 그것도 과학자가 아닌 중의원, 참의원등 130여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바이오사이언스 의원간담회」를 조직, 21세기의 과학일본을 위해서 바이오사이언스 추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자문하고 국민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켜 지금 현재 바이오사이언스분야의 선두주자로 부상시킨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례로써 과학기술의 혁신, 경제입국의 성취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